

2021학년도 모의논술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교사용]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2021학년도 모의논술 개요

2021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 대학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류요약능력, 자료평가능력, 논술논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1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이전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 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이번 모의논술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정치적 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표현의 자유’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서 국민의 기본권 및 언론의 기능과 참여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통합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그에 대한 규제, 온라인상의 모욕이나 비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 1]의 제시문은 관련 학자의 글, 대중매체들에 등장한 기고문 등의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맞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 변형하거나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견해가 사회적으로 표현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층위를 학생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1> 「민주적 관료통제의 정치적 요인에 대한 분석: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중심으로」(정상호)

「관료주의는 팬이 없다. 우리와의 공생관계」(미미야)

『언론 개혁의 기본 방향과 방안』(손태규)

<제시문2> 「함께 사는 세상-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고찰」(홍민정)

<제시문3> 「사이버모욕죄 :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박경신)

<제시문4> 『자유론』(J. S. Mill)

<제시문5> 『소통과 지혜』(이효성)

[문제 2]의 <자료> 역시 고등학교 교과 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유로운 언론이 수행하는 감시기능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문제 1]과 연관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3]의 <보기>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012년 판결을 원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문제 1]에 제시된 주요 논지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찬반 논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평가항목과 문항별 배점

그동안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 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문항별 배점

- [문제 1] : 30점
- [문제 2] : 40점
- [문제 3] : 30점

○ 채점등급별 점수

[문제 1], [문제 3]

- ① A 등급: 30점
- ② B 등급: 24점
- ③ C 등급: 18점
- ④ D 등급: 12점
- ⑤ E 등급: 6점
- ⑥ F 등급: 0점

[문제 2]

- ① A 등급: 40점
- ② B 등급: 32점
- ③ C 등급: 24점
- ④ D 등급: 16점
- ⑤ E 등급: 8점
- ⑥ F 등급: 0점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문항별 세부 채점지침과 채점등급

[문제 1] <제시문1>~<제시문5>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30점)

【 채점지침 】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을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표현의 자유’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이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되었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지만,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다라고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을 감수해야 한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제시문1>, <제시문3>, <제시문4>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제시문2>와 <제시문5>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시문1>은 관료제가 민주주의의 성장과 창의적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가능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정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3>은 무엇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정한다 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낳을 소지가 크므로, 모욕을 이유로 표현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제시문4>에 따르면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이한 의견과 시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결국 <제시문1>와 <제시문4>는 정치적 차원과 지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경우 생겨나는 효용을 강조함으로써, <제시문3>은 법적 차원에서, 특히 모욕 문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에 <제시문2>는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갖는 부작용을 인정하지만, 인종·민족·종교·성차별 등의 편견을 배제해야 할 필요에 따라 의사표현 방식과 내용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달리 말해 언어생활에서의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제시문5>는 인간의 말하기를 하나의 행위로 이해함으로써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한다. 현대 국가가 물리적 폭력 행사를 규제하듯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도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입장이다. 따라서 욕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설이나 폭언 등 심리적 공격 수단이 되는 표현들을 국가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제시문2>는 차별과 편견 제거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시문5>는 인간의 표현이 사회구성원에게 실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물리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가 목적이나 결과를 강조하면서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결과도 언급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점의 변화를 통해 표현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 채점등급 】

- A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차이점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 졌으나, 이를 종합한 두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 D :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문제 2]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 <자료1>에서 <그림1>은 국제언론자유협약 체결 직전 A, B, C 세 국가의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그림2>는 협약 체결 직후 언론자유화 제도 시행에 따른 공무원 비리 적발건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협약 체결 직전 A국의 언론 자유화 정도를 B, C 국가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료1>은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옹호하는지 밝히시오.(세 국가의 공무원 수 및 나머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20점)

(2) <자료2>에서 <그림3>과 <해설>을 참고하여 <그림4>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20점)

【 채점지침 】

[문제 2]는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문제의 공통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제시된 두 개의 자료를 연관시켜 해석해야 한다. 둘째, 해석 결과를 [문제 1]의 한 입장의 옹호와 관련시켜야 한다. 차이점도 두 가지이다. 첫째, (1)은 두 자료를 각각 해석한 다음, 그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지만, (2)에서는 한 자료를 자료 해석 지침으로 활용하여 다른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 둘째, (1)은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옹호하는지 설명하면 되지만, (2)는 실제 옹호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자료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체험해 보도록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였다.

문제 (1)은 자료를 해석하여 협약 체결 직전 A국의 언론자유화 정도를 추론해보라는 (요구1)과 추론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옹호하는지 판단하라는 (요구2)로 이루어진다.

(요구1)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1>과 <그림2> 각각을 해석하고 둘을 연결할 수 있는 가설을 추론해야 한다. <그림1>에는 체결 직전 공무원의 직무수행평가는 나와 있지만 언론자유화 정도는 나와 있지 않다. <그림2>는 체결 이후의 상황은 나타나 있지만 체결 직전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림2>가 나타내는 비리 적발건수는 <그림1>에 나타난 지수 중 청렴지수와 관련된다. 청렴도가 높으면 적발건수가 낮고, 청렴도가 낮으면 적발건수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1>을 보면 청렴지수는 A국이 B, C국에 비해 상당히 낮는데, <그림2>를 보면 언론자유화제도 시행 초기 세 나라의 적발건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미세하게 보면 심지어 청렴지수는 C국이 더 높는데 적발건수는 A국이 더 낮다. 이렇게 청렴지수가 낮은 A국이 청렴지수가 그보다 높은 두 나라와 적발건수에서 유사하다는 점으로부터, 체결 직전 A국에서는 비리가 발각되지 않은 채 은폐되고 있었다는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가설은 <그림2>에 의해 입증된다. 언론자유화 제도 시행 이후 A국의 적발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로 은폐된 비리가 많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B, C 국에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적발건수가 소폭 증가하지만 곧 하향세로 전환하여 초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이 두 나라가 출발 당시부터 청렴도가 높아 은폐된 비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2>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언론자유화 제도 시행으로 빚어진 결과로, 달리 말해 자유롭게 감시, 고발,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은폐된 비리가 폭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B, C국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언론의 감시 기능이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상당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은폐된 비리가 적었지만, A국은 이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 체결 직전에는 많은 비리가 은폐되어 있다가 제도 시행 이후 언론자유화 정도가 높아지면서 고발, 폭로되어 적발건수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협약 체결 직전 A국의 언론 자유화 정도는 B, C국에 비해서 낮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2)와 관련해서 <자료1>은 [문제 1]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언론자유화가 시행된다는 것은 [제시문1]이 말하는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두려움 없는 비판”이 자유롭게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A국의 경우 제도 시행 후 6개월 뒤까지 적발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렴도의 증가 자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B, C국에서 언론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적발건수가 소폭 증가하였다가 단기간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B, C국에서는 은폐된 비리건수가 많지 않았기에 언론자유화의 효용이 단기간에 검증된 것이므로 A국에서도 언론자유화의 효용이 지속되면 언젠가는 낮은 수준의 적발건수에 다다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언론자유화가 정부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언론자유화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옹호할 것이고,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문제 1]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옹호하게 된다.

정리해보면 문제 (1)에서는 학생이 청렴도와 비리 적발건수의 관계를 이해하여 체결 직전 세 국가의 청렴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유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웠는지, 그리고 이 가설을 <그림2>를 통하여 유의미하게 검증하였는지, 그리고 해석된 결과가 [제시문1]의 한 입장과 갖는 논리적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하였는지가 채점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문제(2)는 <그림3>과 <해설>을 통해 자료해석 방법을 파악한 다음 그에 따라 <그림4>를 해석하라는 (요구3)과 이 자료가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자료를 활용한 옹호논리를 직접 제시하라는 (요구4)로 이루어진다.

(요구3)에 따라 <그림4>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 정부정책 결정 및 시행의 투명성이 낮은 사회의 경우 (a) 지점 전후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강화되어도 투명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일정 기간은 완만한 변화만 나타내다가 (b) 지점을 통과할 정도로 강화되면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하여 투명성이 높은 사회로 급격히 변하게 된다. 반대로 투명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c) 지점 전후에서는 언론의 자유도가 웬만큼 약화되어도 투명성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데 그치다가 (d) 지점을 지날 정도로 약화되면 그때서야 급격히 변화하여 투명성이 낮은 사회로 바뀌게 된다.

결국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면서 현재 투명성이 낮은 사회와 높은 사회가 언론자유도에 반응하는 변화의 지점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구4)와 관련해서는 이 점을 활용하여, 달리 말해 <그림4>의 위쪽 선과 아래쪽 선 모두를 활용하여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논의의 방향은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자료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면 [문제 1]의 입장 중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옹호하기에 적절하다.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인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실현되면 투명성이 낮은 나라도 투명성이 높은 나라로 변화할 것이며, 한번 투명성이 높은 나라가 되면 특수한 사정 때문에 단기적으로 언론의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자유에 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투명성이 낮은 나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효용성을 근거로 이 입장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를 전체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a) 지점 전후와 (c) 지점 전후만을 활용할 경우 [문제 1]의 입장 중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옹호할 수 있다. 이 지점들에서는 언론자유도의 증감이 투명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성이 높은 사회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어도 투명성에 큰 하락이 없으므로 편견, 차별, 언어폭력을 배제하기 위해 언론 자유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비교적 쉽게 성립할 수 있다. 언론 자유의 적절한 제한이 결과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투명성이 낮은 사회의 경우에도 언론 자유의 제한을 옹호하는 논리를 합당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편견과 차별 배제, 언어폭력 방지 등이 정부의 투명성 확보보다 왜 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가 정당화되어야 투명성이 낮게 유지되더라도 언론 자유를 제한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펴지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리해 보면 문제(1)에서는 주어진 지침에 따라 <그림2>를 제대로 해석 했는지, 그리고 이를 [제시문1]의 한 입장과 연결시킬 때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옹호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는지가 채점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채점등급 】

- A : 적절하고 충분한 서술을 통해 4개의 요구사항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한 답안
- B : 4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긴 했으나 부분적으로 서술의 적절성이나 충분성에 아쉬움이 있는 답안
- C : 3개의 요구사항은 적절하고 충분한 서술을 통해 충족하였으나 나머지 1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서술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답안
- D : 2개의 요구사항은 적절하고 충분한 서술을 통해 충족하였으나 나머지 2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서술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답안
- E : 1개의 요구사항은 적절하고 충분한 서술을 통해 충족하였으나 나머지 3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서술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답안
- F : 요구사항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답안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문제 3] [문제 1]의 두 입장과 연결지어 <보기>의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모두 논술하시오. (30점)

【 채점지침 】

[문제 3]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하여 [문제 1]에 나타난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각각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이론적 입장을 구체적 사례에 응용하고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댓글 실명제'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익명성이 자칫 오용, 남용되어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댓글 실명제에 의한 익명성의 전체적, 혹은 부분적 제거는 개인들의 의사표현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편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측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다. 그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사회에 부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타 구성원의 권리나 다른 사회적 이익을 위해 때로 이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고 보는 측에게는 댓글 실명제가 실익이 명백하고 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넘어설 경우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정책이다.

가장 훌륭한 답안은 댓글 실명제의 이러한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지문에 등장하는 두 입장의 근본취지를 밝힌 후 찬반의 논리를 전개하는 글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생 수준의 예시 답안을 구성해 볼 수 있다.

- 댓글 실명제에 찬성하는 견해 -

일반적인 면대면 혹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 서적 등의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경우와 비교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의 표명과 교환에는 상당한 익명성이 주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익명성을 방패막이로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거짓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거나 판단을 오도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제한함으로써 의사표현에 책임성을 높이려는 '댓글 실명제'는 긍정적이다.

물론 익명성의 제한이 의사표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자칫 간접적으로나마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개인과 사회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개인이나 사회의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의 <제시문2>에서 논의하는 정치적 올바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고 구성원간의 조화를 위해 표현의 자유에 직접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적인 제한을 가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갖는 호소력은 이러한 제한의 필요에 대해 사회성원들이 적잖이 동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시문5>에서 보여주듯 우리의 말은 때로 물리적 폭력을 능가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들의 폭력사용을 규제하듯 때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할 경우가 있다. 비록 '댓글 실명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에 어느 정도 위축이 예상되더라도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기 때문에 이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댓글 실명제에 반대하는 견해 -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의 교환에는 상당한 익명성이 주어진다. 문제는 이를 오용하여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거짓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고 심지어 사회에 중대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댓글 실명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익명성의 제한이 가져올 여러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댓글 실명제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과 다를 바 없다.

익명성의 제한은 의사표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심지어 간접적으로나마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의사표현의 위축이나 자유의 제한은 개인이나 사회전체에 중대한 손해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이며 현대 사회는 이로부터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 볼 때 [문제 1]의 <제시문3>에서 밝히듯이 시민의 의사소통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의 향유와 행복추구가 중대하게 방해받게 된다. 사회 차원에서 보면 의사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제시문1>이 지적하듯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관료조직을 비롯한 국가기구 전반을 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핵심수단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시문4>가 설명하듯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거나 차단된다면 결국 한 사회는 여러 사정과 의견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편협한 시각과 결정에 의해 지배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비록 '댓글 실명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초래될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채점등급 】

A : ‘댓글실명제’의 핵심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두 입장 및 제시문의 주요논지를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논술한 답안

B : ‘댓글실명제’의 핵심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논술하였으나, 논리의 구체성이 결핍된 답안

C : ‘댓글실명제’의 취지를 부정확 혹은 불분명하게 이해하였지만 [문제 1]의 두 입장을 활용하여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논술한 답안

D : ‘덧글실명제’의 취지를 부정확 혹은 불분명하게 이해하였으며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논술하였으나, 논리의 구체성이 결핍된 답안

E : ‘덧글실명제’의 취지를 부정확 혹은 불분명하게 이해하였으며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제대로 논술하지 못한 답안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